

이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에 “허위·왜곡·누락 보고 용납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전 허위·왜곡보고와 보고누락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하며 “꼭 상사를 속일 필요가 있으면 그만 두고 속이는 게 좋겠다. 이것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지 마라”며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모르는 데 아는 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판단이 왜곡된다. 그것은 더 나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왜곡보고의 문제를 강조하며 “요약 보고와 본문 내용이 틀린 경우가 많은데 의도가 있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본문 속에 숨겨둔 것”이라고 했다.

또 “허위보고는 말할 것도 없다”며 “일부러 고의로 속이기 위해서 한 허위보고는 공무원일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말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약간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허위보고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보고도 문제이지만 또 한 가지는 보고를 누락하는 것이다.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숨기는 것”이라며 “이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어 “상사들은 부족한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의사결정이 왜곡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질병청 등 업무보고 전 “객관적인 투명한 보고해야”

“모르는 것 아는 척하면 판단 왜곡돼… 허위보고, 공무원 자격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라며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면서 국민의 일을 대신 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충직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집

단지성이 모여야 정책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 완성도도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정부서 이전과 달리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선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고,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1

與, 내란재판부 2심도입·내부추천 잠정결론 법 명칭서 ‘12·3’, ‘윤석열’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내란 청산’ 주요 법안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정식 명칭에서 ‘12·3’, ‘윤석열’ 등을 빼기로 했다. 재판부 도입은 2심부터, 구성은 내부 추천으로 방향을 정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본청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의 정식 명칭에서)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관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기존 명칭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여기서 ‘12·3’과 ‘윤석열’이 빠진 것이다. 박 대변인은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지적)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1심과 항소심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던 기존 내용은 2심부터 설치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전속 관할로 두는 쪽으로 정리됐다.

재판부 구성을 위한 판사 추천은 기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장관 몫은 빼고 법원 내부 위주로 추천 위를 꾸리도록 했다. 추천 법관은 대

법관 회의와 대법원장 임명을 거쳐 정식 임명되도록 한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 핵심 법안인 내란전담재판부법 연내 통과를 위해 위한 우려 불시에 주력해 왔다. 이날 최종안을 도출하려 오전부터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간 연석회의를 여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이중에서는 로펌 법률 자문 결과 및 그간 수집한 각계·전문가 의견이 공유했다. 박 대변인은 “(그간 논의) 최대공약수를 정리해 의총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문화의 최종 단계를 거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와 함께 이안을 기본으로 세밀하게 (추가) 정리할 것은 해서 최종안을 성안해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잠정안을 마련한 만큼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정당 설득 작업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임시국회 2차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정식 당론 추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작업이 마무리되면 법안은 오는 22~23일께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

이 대통령 “햇빛소득 전국으로 확대해야… 신안군 담당국장 데려다 써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을 사회적 경제연대의 모범 사례로 꼽으며 전국적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 전국 확산 방

안’을 보고받고 “신안이 군내에서 햇빛마을과 관련해 사업하려면 주민 몫으로 30%를 의무 할당하는 것을 조례로 아예 정해놔라”며 “아주 모범적 형태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군은 전부 연구소멸위협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연금 때문에 인

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나라 운명을 가르는 큰 사업인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사실 괴롭혔다. 전국 확산 속도를 좀 빨리하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다른 군 단위나 마을에도 확산

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사업은 구매 보증을 해주니 남는 게 확실하다. 이걸 알아서 일종의 알박기처럼 선점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역량 있는 공직자들 많겠지만 인터뷰를 보니 신안군 담당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는 걸 검토하든지 해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뉴스1

與 “尹·김건희 싸움 단순한 치정극 아냐… 그림자 권력의 자백”

특검 “김건희, 계엄 선포 직후 ‘모든 게 망가졌다’ 발언해

그림자 권력의 자백”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군화발이 국회를 짓밟고 헌법이 유린당했던 현실 앞에서, 김건희의 머릿속에는 ‘국가’도 ‘국민’도 없었다”며 “오로지 ‘내 계획이 틀어졌다’는 사적인 분노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김건희는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라며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아 왕을 꿈꿔왔던 계획이었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권력을 사유화하다 못해, 영원한 독재 권력을 꿈꾸며 헌정 질서마저 자신의 안위를 위한 부속품으로 여긴 비뚤어진 사고야 말로 이번 내란 사태의 또

다른 몸통”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김건희가 그토록 지키려 했고 망쳐버렸다고 한탄한 그 추악한 계획의 실체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수와 윤석열과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의 추악한 민낯과 범죄 행위들을 끝까지 밝혀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

서삼석 국회의원, 8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이커머스 불공정·농어촌 안전사각 개선 등 ‘실질 국감’ 인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8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개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등 상임위원회별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쿠팡 등 이커머스 불공정 거래 문제,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 공공기관·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해 집요하게 추궁하며 실질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정감사 질의는 정부·공공기관·기업의 즉각적인 시정 및 제도 제검토로 연결되며 ‘보여주기식 국감’이 아닌 국민 체감형 국감으로 주목을 받았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매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2025년도도 조사를 이어가 윤석열 전 정부의 계엄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어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취합해 지난 6월 출범한 새 정부에 전달했다. 또 최근 6년간 농어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악화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농정 정책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농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16일 “국정감사는 정쟁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특히 쿠팡을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농어촌과 안전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와 증거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